

제21대 총선 4개 정당 젠더폭력 분야 공약 비교분석

2020.03.26

※ 제21대 총선 정당 공약분석에 함께한 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새오티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여성환경연대 울산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총 36개 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 외 35개 여성단체, 성평등 관점의 공약 분석 평가, 유권자들의 선택 돕고자

성평등 민주주의는 시대적 과제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외 35개 여성단체는 성평등 민주주의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아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실현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 4개의 원내 정당의 제21대 총선 공약을 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여성연합 등은 성평등 관점의 공약 분석·평가를 통해 각 정당의 성평등 정책 수준을 비교 분석하고 정책실현 의지를 평가하며, 그 결과를 제21대 총선 유권자들에게 정보로 제공하여 유권자들의 지지 정당과 후보자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진행하였다.

1차 분석 대상은 4개 정당의 젠더폭력 분야 공약(2020년 3월 25일 기준)이다. 분석은 각 정당에서 발간한 정책공약집, 각 정당의 제21대 총선 공약 보도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10대 정책 자료 및 여성연합이 각 정당에 보낸 '제21대 총선에 요구하는 주요 젠더과제와 정당 공개질의서' 답변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했다. 국민의당은 공식 발간된 정책공약집이 없어 안철수 당대표의 기자회견문(2/17, 2/19, 3/24) 자료를 포함하였다.

통합당, 젠더 폭력 공약 빈약 여성 현실에 대한 낮은 인식 보여줘

민주당, ‘성차별·성희롱 금지와 권리구제 법률’ 제정 추진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거나 유보적 정책 아쉬워

정의당, 여성 현실 반영한 공약 가장 많이 내놓아
성착취 문제 해결 공약 유일, 공약에 젠더 관점 반영 노력 보여

국민의당, 여성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 시도
성평등·인권교육 정규교육과정 포함 공약 의미 있어

통합당은 디지털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을 ‘신종 여성범죄’라고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 중심의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여성 1인 가구 안전, 아동 성폭력 공약 외에는 젠더폭력 관련 공약이 없어 여성현실에 대한 낮은 인식을 보여주었다. 통합당은 제21대 국회의 중요한 젠더 정책 과제인 강간죄, 가정폭력, 성착취 근절과 관련한 어떠한 공약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나마 빈약하게 제시한 공약도 주로 보호 대상으로서의 여성을 상정하고 보호 중심의 정책이었고 구조적, 예방적 접근보다는 사후적 대책이 많았다. 사실상 통합당의 젠더 폭력 정책은 정당 공약이라기에는 지나치게 빈약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평가를 진행하기조차 어려웠다.

민주당은 다른 당에는 없는 ‘성차별·성희롱 금지와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 제정을 약속했고, 가정폭력 관련하여 가해자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체포우선주의 도입,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으로 변형카메라 수입·판매 및 소지 등록제 도입, 변형카메라 이력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하여 차별성을 보였다. 그러나 여성연합이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답변을 보냈음에도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고, 가정폭력 문제의 핵심인 법의 목적조항 개정 공약은 없었으며,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대해서는 ‘검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폐지에는 ‘원칙적’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또한 성매매/성착취 관련해서는 제20대 총선 공약보다 후퇴하여 공약에 아예 포함하지도 않았다. 민주당은 대체로 정책의 실질적 추진 가능성에 더 집중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4개 정당 중 가장 폭넓은 분야를 포괄하는 젠더공약을 발표했고, 유일하게 성매매/성착취 대응 공약을 포함했으며 ‘차별금지법’ 제정도 공약했다. 또한 「여성폭력기본법」 개정,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성매매 처벌 강화, 직장 내 성희롱 처벌 강화,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통한 교내 성폭력 문제 해결도 4개 정당 중 유일하게 포함하여 젠더폭력 현실에 대한 관심과 깊은 이해를 보여줬다. 한편 디지털성폭력과 관련해서는 디지털성범죄 종식을 위한 국가비전 수립 및 법·제도의 전면 정비, 디지털성범죄 산업 유통구조 차단 정책, 불법촬영물 공급망 단속처벌 강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규제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사안별 단편적, 사후적 접근이 아닌 구조

적, 예방적 접근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평가할 수 있다. 1인 가구 안전 정책의 경우도 다른 당들은 대체로 사후적 접근에 머물러 있는 반면 정의당은 1인 가구 안전 문제의 핵심 원인을 젠더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그의 해결에 접근하고자 하는 등 젠더적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한다.

국민의당은 젠더폭력과 관련하여 영역별, 사안별 대응 정책뿐 아니라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정책을 제시하여 차별성을 보였다. 성교육 표준안을 보완하여 성평등·인권 통합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 포함, 가정폭력처벌법 목적 조항의 개정, 강간죄 개정, 디지털 성폭력 유통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 강화 등은 근본적인 예방과 해결에 접근하는 공약들도 평가된다. 국민의당은 다른 당과 달리 아동·청소년 안전 공약을 별도로 발표하며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를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았다.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 허용법 개정 추진’ 공약은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으로 의미 있으나 현장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판단한다.

첨부

1. 주요 정책별 정당 비교 분석
2. 정당별 여성폭력 주요 정책. 끝.

첨부1. 주요 정책별 정당 비교 분석

□ 성폭력

정당	내용
민주당	- '비동의 간음죄' 도입 검토
통합당	- 정책 없음
정의당	- '비동의 강간죄' 조속 도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조항 삭제, 음주·약물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한 경우 처벌 강화
국민의당	- 동의 여부로 강간 구성요건 개정 - 폭행, 협박, 위협, 무력사용 성폭행 범죄 시 집행유예나 감형 금지

#미투운동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구성해왔던 남성 중심적 '성폭력' 개념에 대한 질문이자 문제제기였다. 실제로 2019년 1~3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 66개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강간 상담 사례분석결과에 따르면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행사된 성폭력 피해사례는 28.6%(295명)에 불과했다. 성폭력 신고율이 10% 미만으로 낮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률이 낮은 것은, 그리고 여성들이 법과 제도를 믿지 않고 제도 밖에서의 말하기를 선택하는 이유는 현행 성폭력 관련 법과 제도에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제21대 국회의 #미투에 대한 첫 번째 응답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 여부가 아니라 '동의' 여부로 바꾸는 형법 개정이어야 한다. 또한 여성들의 경험하는 성폭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성폭력 관련 법규를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한 걸음 물러난 자세를 취했고 미래통합당은 공약으로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반면 정의당은 '비동의 강간죄'의 조속한 도입과 음주·약물 사용 범죄 처벌 강화를, 국민의당은 개정과 함께 강력한 처벌을 약속했다.

제21대 국회는 개원 즉시 강간죄를 동의 여부로 개정해야 하며 '여성폭력 관련 형법 및 특별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젠더 기반 여성폭력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성폭력 관련 법제를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 아동·청소년 성폭력

(※ 피해자의 특성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 또는 정책 공약이 실질적인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해결에서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다만 2개의 정당이 공약을 구분하였기에 나누어 정리하였다.)

정당	내용
민주당	- 정책 없음

<p>통합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성범죄자 강력 처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법) 개정 -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생활권역에 성범죄자 체류 금지 강화 : 접근금지 범위 100m에서 2km로 확대, 주거지·학교 반경 5km 거주 제한 -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대상 주취감경 폐지 공론화 - 해바라기센터, 아동보호 기관을 통한 의료 지원과 심리상담 지원 확대 - ‘조두순 방지법’마련하여 아동 성범죄자 강력 처벌
<p>정의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청소년’ 규정 삭제 후 피해청소년으로 재규정(성매매 정책과 중복)
<p>국민의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제도 개선 - 성범죄 방지 제도를 미국, 영국 수준으로 개선, 범죄자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으로 강력 처벌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 12세 미만자와 성행위 시, 12세 이상~16세 미만자 폭행·협박·의식불명상태 성행위 시 최고 무기징역 - 「형법」 개정 : 아동·청소년 범죄의 경우 감형, 집행유예, 가석방 금지 - 성착취 피해 아동 및 청소년 보호 법안 마련 - 흉악범죄자 인적사항에 대한 공개 확대, 접근금지 강화 - 그루밍 방지조항 신설 - 아동, 청소년 성착취 불법영상물 제작-유통-소지 강력 처벌 -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 허용 법 개정 추진하여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단속에 한해, 제한적으로 합정수사와 유도수사 허용하는 법 개정 추진 - 아동, 청소년 대상 유괴죄, 성범죄, 살인죄 등 흉악범죄자의 인적사항 미국 수준으로 공개 - 피해 아동, 청소년의 집, 학교 등으로부터 1km 이내 가해자와 가해자 대리인 접근 금지

현행법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용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학대와 성착취 범죄를 희석하는 문제적인 용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용어를 변경하고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청소년’이 아니라 ‘피해·청소년’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관련 법률 정비를 통해 범죄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해자들은 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를 지속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아동대상 성폭력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를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았다.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 허용법 개정 추진’ 공약은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으로 의미 있으나 현장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의당은 별도의 정책을 내지는 않았지만 문제의 핵심을 다룬 공약이 포함되었다.

통합당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의지를 공약에 담았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 해결의 핵심 과제인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의심된다. 특히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강간죄 개정 관련 공약은 없으면서 아동·

청소년 성폭력범죄에만 집중하는 것은 성폭력문제의 실질적인 해결보다는 아동·청소년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으로만 위치시키기 때문에 문제적이다. 성범죄자의 체류 금지 강화 공약 또한 주거지와 학교가 밀집한 도시지역에서 정책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실효성이 의문이다.

□ 디지털 성폭력

정당	내용
민주당	<p>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형카메라 수입·판매 및 소지 등록제 도입, 변형카메라 이력정보시스템 구축 -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 강화 : 상담, 삭제지원, 사후 모니터링으로 원스톱 서비스 지원 - 불법촬영물 차단에 AI기술 도입 및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적 시스템 활용하여 신속한 삭제지원서비스 구축 - 성착취 영상물의 구매자소지자 처벌 강화, 유포협박·사진, 영상합성 등 행위양태 확대하여 사각지대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통합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처벌법」 개정 : 촬영 동의와 상관없이 영상 이용 협박도 처벌대상에 포함, 영상협박 피해자도 제도적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함. -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 : 변형카메라 관리제 도입
정의당	<p>디지털성범죄 종식을 위한 국가비전 수립 및 법·제도 전면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성폭력 대응을 위한 국가 비전 수립 - 「성폭력특례법」 개정을 통한 처벌강화 <p>디지털 성폭력 촬영물 유포, 재유포시 가중처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성범죄 불법영상물 삭제비용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 딥페이크 등 합성 영상 제작, 배포에 대한 처벌규정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원스톱지원체계 강화 : 신고-상담-사후관리까지 종합서비스 강화 (긴급삭제 지원, 사후 모니터링, 전문상담, 무료 법률 서비스 등) <p>산업 유통구조 차단 및 단속 수사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촬영물 공급망(사이트운영자, 광고업자, 웹하드, 헤비업로더 등) 단속처벌강화 - 디지털 성범죄 산업 유통구조 차단,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규제 강화 • 「청소년성보호법」의 경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발견 시 삭제, 전송방지, 중단 조치에 대한 의무 부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스스로 불법촬영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낼 수 있도록 조치의무 부과 -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체결로 단속, 수사에서 국제수사 공조 강화
국민의당	<p>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설치, 해외 공조 추진 - 불법영상 식별 후 자동삭제하는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및 실행에 대한 지원예산 확보 -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 피해촬영물 신속한 삭제, 차단토록 - 불법 촬영물 제작자, 유포자, 소비자 모두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특정 불법촬영물, 재범 시 가중처벌 - 제작자, 유포자에게 불법 촬영물 삭제비용 청구, 소비자는 벌금형 - 유통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 강화
--	--

1999년 개설된 ‘소라넷’부터, 웹하드, 웹캠투 비디오, 텔레그램 n번방까지 디지털 기반 성착취 범주는 갈수록 행위양태는 다양해지고 정도는 극악해지고 있으며 피해도 매우 심각하다. 최근 텔레그램 앱을 통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이 알려지면서 디지털 성폭력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분노가 고조되고 있다. ‘박사방’ 운영자 용의자 신상공개 청원은 3월 25일 기준, 일주일 만에 260만 명이 참여했고 뒤이어 올라온 가입자 전원 신상공개 청원도 시작 닷새 만에 180만 명이나 참여했다.

디지털 성폭력 공약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현실을 반영해서인지 4개당 모두에 포함되었다. 정의당은 사안별 단편적 접근으로는 디지털 성폭력범죄 종식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담아 큰 틀에서 국가 비전을 수립하고 법·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를 하자는 공약을 담았다. 가해자에 대한 확실하고 강한 처벌 뿐 아니라 산업 유통구조와 서비스제공자의 문제까지 포괄적인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다만 이미 제도가 마련된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생색내기용 정책나열에 그치지 않을지 우려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그동안 여성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입법 필요성을 전달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나 정의당처럼 실질적인 범죄 종식을 위한 국가 비전의 수립까지 고려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 특히 민주당이 산업 유통구조와 플랫폼 사업자의 책무 강화 관련 공약을 담지 않은 것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및 정책 의지가 있는지 질문하게 한다.

한편 통합당이 디지털성폭력의 심각성에 별로 주목하지 않고 있음은 빈약한 공약이 말해준다.

디지털 성폭력범죄는 사전 예방·차단이 중요하다. AI 도입을 통한 사후 삭제(민주당, 국민의당)만으로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산업화되고 있는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불법촬영물 공급망 단속 처벌 강화, 산업 유통구조의 차단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규제 강화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디지털성폭력 공약이 포퓰리즘 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각 정당은 좋은 정책의 나열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한다.

□ 성매매/성착취 범죄

정당	내용
민주당	정책 없음
통합당	정책 없음
정의당	<p>성매매 성산업 강력 대응 대책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수자 처벌 강화, 성산업 규제 등 범죄 통제 체계 강화 • 알선자 처벌 강화, 불법수익 몰수 추정 (「성매매처벌법」 개정) • 인신매매 단속처벌 위한 전담반 강화 및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 ‘대상청소년’ 조항 삭제, 피해청소년으로 재규정
국민의당	정책 없음

텔레그램 n번방 등 여성에 대한 성착취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뜨겁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나드는 성착취와 성산업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10만 국민동의 청원을 줄속 처리했다.

4개 정당 중 유일하게 정의당만 성산업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산업 규제 등 범죄를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 알선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불법수익 몰수 추정 등 강력한 대책을 포함했다.

민주당은 성착취 관련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제20대 총선에서는 성산업 및 성착취 근절(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비범죄화,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공약을 포함했었다. 그동안 웹하드, n번방 등의 문제가 불거지며 여성에 대한 성착취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고, 현재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제21대 총선 공약에 관련 공약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실망스럽다.

한편 관련 공약조차 없는 통합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n번방 국민동의 청원을 안건으로 다루면서 ‘청원한다고 법 다 만드냐’, ‘내가 자기만족을 위해서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긴다 이것까지 (처벌이) 갈꺼냐’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의원들의 발언을 통해 성착취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없고 국회의 책무조차 모르는 자격미달 수준을 보여줬다.

21대 국회에서는 성착취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성매매피해 여성에 대한 전면적인 비범죄화와 성산업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들을 국가 비전속에서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 가정폭력

정당	내용
민주당	<p>「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범 체포(현장 체포주의) 도입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의 원칙적 폐지 - 피해자 보호명령에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 추가 - 임시조치 위반 시 징역, 벌금형 <p>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 대응 책임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 시·군·구공무원 배치하여 개입,조사 업무 수행 - 유관기관 아동보호 협조체계 구축 <p>피해 아동 보호·치료를 위한 전문 인프라와 인력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확대, 전문가 확충 - 예방 관련 예산 정부 일반 회계로 전환과 확대 추진
통합당	정책 없음

정의당	<p>「가정폭력처벌법」 개정, 피해여성 인권보장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조 입법목적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와 가정 구성원의 안전과 인권보장’으로 개정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전면 폐지 -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강화 및 재범방지 - 가해자 보호처분 이행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가해자 상담은 처벌의 일환으로 별도 기관에서 시행) - 피해자 초기 응급대응 및 보호·자립 지원 강화
국민의당	<p>「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법의 목적인 가정의 회복이 아닌,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도록 전면적 개정 - 데이트 폭력까지 포함하여 대상 확대 - 피해범위 확대 : 신체, 정서, 성적 폭력 및 그루밍(통제, 조종 행위) - 가해자와 피해자 즉시 분리, 임시 접근금지명령의 신속처리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이메일, 전화, SNS까지 포함 -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요건 구체화, 가정폭력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제외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폐지 - 처벌기준 :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보호시설 및 상담소 양적 확장, 피해여성과 가족이 생활가능한 임시주거공간 제공, 피해자 주거지원, 생계비, 의료비, 동반아동 지원 현실화

가정폭력 피해당사자들이 가정폭력 사법체계 개선 방안으로 가해자 체포우선주의 도입(89.4%), 가해자 상담보다 처벌 강화(68.6%) 등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에도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을 관통하는 ‘가정 보호와 유지’ 패러다임은 여전히 가정폭력을 ‘가정 내의 경미한 범죄’로 여기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가로막고 있다. 현재 「가정폭력처벌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거나 처벌의사를 철회하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거나 불기소 처리된다. 이로 인해 2016년 기준 8.5%의 기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1%대의 신고율을 고려하면 사실상 가정폭력은 거의 처벌이 되지 않는 셈이다.

가정폭력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을 ‘가정의 회복’이 아닌, ‘피해자 보호’로 바꾸어야 한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목적조항 개정과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 전면 폐지를 공약했다. 민주당은 가장 중요한 목적 조항 개정을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해서는 원칙적 폐지 공약으로 모호하게 얼버무렸다. 그럼에도 가해자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체포우선주의 도입을 공약한 것은 다행이다.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2018년 한해에만 24만 8천 건 가량 되었다. 그럼에도 통합당은 가정폭력 관련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국민의당은 가정폭력 관련 공약을 매우 구체적으로 내놓았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요건 구체화, 가정폭력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제외, 가정폭력 피해범위에 데이트 폭력과 그루밍 등을 포함하여 확대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 스토킹 처벌법

정당	내용
민주당	‘스토킹범죄처벌특별법’ 제정 - 스토킹 범죄 양태 구체화, 피해자 범주 확대 - 처벌기준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
통합당	- ‘스토킹 방지 특별법’ 마련 :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 마련
정의당	‘스토킹처벌 특별법’ 제정 - 스토킹 범죄의 예방,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스토킹 범죄에 대한 포괄적 정의로 피해자 지원 확대 • 스토킹 전반에 대한 체계적 규제, 스토킹 행위자의 처벌 강화 • 신변안전조치, 임시조치, 보호처분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보호 강화
국민의당	‘스토킹 방지법’ 추진 - 스토킹 대상 임시 접근금지 명령절차 신속 처리 가능하도록 간소화 - 이메일, 전화, SNS까지 포함 -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 무기소지, 반복행위는 가중처벌 - 상습스토킹은 징역형으로 처벌

1999년 이후 제19대 국회까지 총 8개의 스토킹범죄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제20대 국회에도 총 7개의 제·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실질적 논의 없이 계류 중이다. 정부 또한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했으나 아직도 법안을 발의하지 않고 있다.

스토킹범죄에 관련 공약은 4개 정당 모두에 포함되었고 그 내용도 대동소이하다. 이미 여러차례 입법안이 제출되었고 4개 정당이 모두 공약한 만큼 제21대 국회에서는 실질적인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여성 1인 가구 안전

정당	내용
민주당	‘스마트 여성 안심 통합 네트워크’ 구축 통한 여성 1인가구 불안 해소 -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여성안심 앱, 전국 CCTV, 국가재난 안전체계(112, 119), 전자발찌 위치추적시스템 연계하여 안전 서비스 지원 강화 - ‘112 긴급신고 앱’, ‘SOS 국민안심 서비스’ 등 강화하여 신속한 신고체계 구축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시 서비스 - 범죄예방 환경설계(셉테드, CPTED) 활성화를 통해 건축 허가 단계로 강화, 범죄 취약지 대상 범죄예방시설(조명, 비상벨, 반사경 등) 확대 구축
통합당	여성 1인가구 대상 안전종합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폭력기본법」 개정안 발의, 1인가구 범죄 예방을 위해 ‘디지털비디오 창’, ‘문열림센서’, ‘휴대용비상벨’ 등 방범장치를 위한 ‘스마트 안심세트’ 지원 - 성범죄자 문자알림 서비스 도입 : 1인 여성가구로 서비스 대상자 확대, 문자 서비스로 개편 - 경찰청 범죄통계 시스템 내 ‘여성 1인가구 대상의 범죄통계’ 신설 - 범죄 없는 거리 조성 : 지역별 맞춤형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 2,000개소 신규 설치,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정의당	<p>여성 1인가구의 안심 주거 실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셉테드 인증제도 도입과 확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범죄예방환경설계 시설 신설·확충시 보조금 지원과 세제혜택 부여, 최저주거 기준에 ‘안전 기준 포함’, ‘여성홈 방범서비스’기업에 세제 지원 확대, 배달대행업 종사자 등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제한
국민의당	정책 없음

소위 ‘신림동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1인 여성 가구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안전을 위한 비용을 개별적으로 지불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안전 주거비용’을 여성 개인이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민주당, 통합당, 정의당은 1인 가구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등 한 개의 정책만 예방을 위한 정책이고 나머지는 사후 대응 정책을 내놓았다. 통합당 역시 사후 대책에 집중한 정책이 중심이고 그마저도 이미 서울시, 부산시 등 지자체에서 실행중인 정책과 유사하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제시한 정책들은 대부분 여성을 보호의 대상으로 삼거나 여성에게 조심할 것을 요구하는 정책에 머물러 있다.

여성 1인가구의 취약성은 주거의 불안정에서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 최저주거기준에 ‘안전 기준’을 포함한 정의당의 공약은 그래서 의미 있다.

여성 1인가구가 경험하는 불안과 성폭력 문제는 단순한 가구 형태에서만 비롯하는 문제가 아니며 여성을 대상화하고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 가부장적 사회구조의 문제에서 기인한다. 권리로서 안전은 반성폭력 문화 및 성평등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젠더폭력 대응 시스템을 실효적으로 움직이는 등 제도 및 인식개선이 뒷받침되어야 보장될 수 있으며,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여성에게 피해 책임을 전가하고 통제하지 않는 정책, 가부장적 사회구조를 바꿔내는 정책이 필요하다.

나아가 1인 가구에 대해 잔여화, 임시화된 시각으로 불안과 위험을 전제한 ‘불안 해소’ 제도보다는 혈연가족을 넘어선 다양한 시민결합을 지원하고 사회적 가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정당	내용
민주당	정책 없음 (정책질의서에 찬성 응답)
통합당	정책 없음
정의당	-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사유와 영역을 기본으로 하고 다양한 사유와 영역을 추가하고, 차별행위 처벌과 예방, 구제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제정
국민의당	정책 없음

더 이상 차별과 혐오가 없는, 모든 존재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차별금지법은 참여정부의 공약이었고, UN과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양한 국내외 인권기구에서 한국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1대 총선 이후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인권은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일부 기독교 혐오세력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은 구성원의 인권보장과 증진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천명했다.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을 공약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여성연합이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공당으로서의 책임있는 태도로 21대 국회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통합당과 국민의당도 차별과 혐오에 보다 단호한 태도를 정책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첨부2. 정당별 여성폭력 주요 정책

1. 더불어민주당

순서	주요내용	세부내용
1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범 체포(현장 체포주의) 도입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의 원칙적 폐지 - 피해자 보호명령에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 추가 - 임시조치 위반 시 징역/벌금형
2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형카메라 수입·판매 및 소지 등록제 도입, 변형카메라 이력정보 시스템 구축 -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 강화 : 상담, 삭제지원, 사후 모니터링으로 원스톱 서비스 지원 - 불법촬영물 차단에 AI기술 도입 및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적 시스템 활용하여 신속한 삭제지원서비스 구축 - 성착취 영상물의 구매자·소지자 처벌 강화, 유포협박·사진, 영상합성 등 행위양태 확대하여 사각지대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3	‘스토킹범죄처벌 특례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톱킹 범죄 양태 구체화, 피해자 범주 확대 - 처벌기준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
4	비동의간음죄 도입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 검토
5	‘스마트 여성 안심 통합 네트워크’ 구축 통한 여성 1인가구 불안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여성안심 앱, 전국 CCTV, 국가재난 안전체계(112, 119), 전자발찌 위치추적시스템 연계하여 안전 서비스 지원 강화 - ‘112 긴급신고 앱’, ‘SOS 국민안심 서비스’ 등 강화하여 신속한 신고체계 구축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시 서비스 - 범죄예방 환경설계(셉테드, CPTED) 활성화를 통해 건축 허가 단계로 강화, 범죄 취약지 대상 범죄예방시설(조명, 비상벨, 반사경 등) 확대 구축
6	‘성차별·성희롱 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 금지와 피해구제를 구체화한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2. 미래통합당

순서	주요내용	세부내용
1	신종 여성범죄의 안전망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 피해자 거주 지역 접근 금지하는 ‘임시조치’ 가능케, 피해자에게 신변 보호 조치 등 피해자 지원제도 제공 - ‘스토킹 방지 특별법’ 마련 : 스톱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 마련 - 「성폭력처벌법」 개정 : 촬영 동의와 상관없이 영상 이용 협박도 처벌대상에 포함, 영상협박 피해자도 제도적 지원 받을 수 있도록 -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 : 변형카메라 관리제 도입
2	여성 1인가구 대상 안전종합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폭력기본법」 개정안 발의, 1인가구 범죄 예방을 위해 ‘디지털비디오창’, ‘문열림센서’, ‘휴대용비상벨’ 등 방법장치를 위한 ‘스마트 안심세트’ 지원 - 성범죄자 문자알림 서비스 도입 : 1인 여성가구로 서비스 대상자 확대, 문자 서비스로 개편 - 경찰청 범죄통계 시스템 내 ‘여성 1인가구 대상의 범죄통계’ 신설 - 범죄 없는 거리 조성 : 지역별 맞춤형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한 범죄예방디자인 2,000개소 신규 설치,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3	아동 성범죄자 강력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생활권역에 성범죄자 체류 금지 강화 : 접근 금지 범위 100m에서 2km로 확대, 주거자·학교 반경 5km 거주 제한 -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대상 주취감경 폐지 공론화 - 해바라기센터, 아동보호 기관을 통한 의료 지원과 심리상담 지원 확대 - ‘조두순 방지법’ 마련하여 아동 성범죄자 강력 처벌

3. 정의당

순서	주요내용	세부내용
1	‘비동의 강간죄’ 조속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간죄’ 구성요건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개정, ‘강간죄’ 법률 체계 정비
2	디지털성범죄 종식을 위한 국가비전 수립 및 법·제도 전면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성폭력 대응을 위한 국가 비전 수립 -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한 처벌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성폭력 촬영물 유포, 재유포시 가중처벌 • 디지털 성범죄 불법영상물 삭제비용 가해자에게 구상 • 딥페이크 등 합성 영상 제작, 배포에 대한 처벌규정 보완 - 아동·청소년 성착취 강력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불법영상물, 아동성착취 영상물로 용어 재규정, 소지 처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채팅앱 설치 실행의 인증강화 관리 규제 등 채팅앱 관련 성매매방지법 개정 • 사진, 영상 유포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 적용으로 수사 실질화 - 피해자 원스톱지원체계 강화 : 신고-상담-사후관리까지 종합서비스 강화 (긴급삭제 지원, 사후 모니터링, 전문상담, 무료 법률 서비스 등)
3	산업 유통구조 차단 및 단속 수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촬영물 공급망(사이트운영자, 광고업자, 웹하드, 헤비업로더 등) 단속처벌 강화 - 디지털 성범죄 산업 유통구조 차단,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규제 강화 • 「청소년성보호법」의 경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발견 시 삭제, 전송방지, 중단 조치에 대한 의무 부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스스로 불법촬영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낼 수 있도록 조치의무 부과 -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체결로 단속, 수사에서 국제수사 공조 강화
4	‘스토킹처벌 특례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토킹 범죄의 예방,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 • 스토킹 범죄에 대한 포괄적 정의로 피해자 지원 확대 • 스토킹 전반에 대한 체계적 규제, 스토킹 행위자의 처벌 강화 • 신변안전조치, 임시조치, 보호처분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보호 강화
5	「여성폭력기본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폭력 및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의 확대 (가족, 친구, 친척, 직장동료, 이웃 등 직간접 피해자 포함) - 피해자 보호 지원과 여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조항 개정으로 국가 책임 강화
6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피해여성 인권보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조 입법목적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와 가정 구성원의 안전과 인권 보장’으로 개정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전면 폐지 -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강화 및 재범방지 - 가해자 보호처분 이행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가해자 상담은 처벌의 일환으로 별도 기관에서 시행) - 피해자 초기 응급대응 및 보호자립 지원 강화
7	성매매 성산업 강력 대응 대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수사 처벌 강화, 성산업 규제 등 범죄 통제 체계 강화 • 알선자 처벌 강화, 불법수익 몰수 추징 (「성매매처벌법」 개정) •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조항 삭제, 음주·약물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한 경우 처벌 강화 (「성폭력처벌법」 개정) • 인신매매 단속처벌 위한 전담반 강화 및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 ‘대상청소년’ 조항 삭제, 피해청소년으로 재규정
8	「사립학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학교법」 개정 : 교원 징계위원회 외부 위원과 여성, 학생

	개정, 교원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 개선	<p>참여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범죄 가해자 교원 징계 강화,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 개선 • 가해자 징계 강화 • 가해자 대상 교육·상담 등 재발방지 조치 강화 - 교사 성평등 교육과 연수 강화
9	직장 내 성희롱 처벌 강화, 피해자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내 성희롱 형사처벌 - 성희롱 사업주 벌칙조항 확대 적용,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성희롱, 폭언, 폭행 피해 제기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명문화
10	‘차별금지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차별금지사유와 영역을 기본으로 하고 다양한 사유와 영역을 추가하고, 차별행위 처벌과 예방, 구제를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
11	여성 1인가구의 안심 주거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셉테드 인증제도 도입과 확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범죄예방환경설계 시설 신설·확충시 보조금 지원과 세제혜택 부여, 최저주거기준에 ‘안전 기준 포함, ‘여성홈 방법서비스’ 기업에 세제 지원 확대, 배달대행업 종사자 등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제한

4. 국민의당

순서	주요내용	세부내용
1	‘스토킹방지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토키 대상 임시 접근금지 명령절차 신속 처리 가능하도록 간소화, 이메일, 전화, SNS까지 포함 -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키, 무기소지, 반복행위는 가중처벌 - 상습스토키는 징역형으로 처벌
2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법의 목적인 가정의 회복이 아닌,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도록 전면적 개정 - 데이트 폭력까지 포함하여 대상 확대 - 피해범위 확대 : 신체, 정서, 성적 폭력 및 그루밍(통제, 조종 행위) - 가해자, 피해자 즉시 분리, 임시 접근금지명령의 신속처리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이메일, 전화, SNS까지 포함 -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요건 구체화, 가정폭력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제외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폐지 - 처벌기준 :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보호시설 및 상담소 양적 확장, 피해여성과 가족이 생활가능한 임시주거공간 제공, 피해자 주거지원, 생계비, 의료비, 동반아동 지원 현실화
3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시적 동의 의사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관계를 시도했다면 성폭행으로 처벌하도록 개정 - 폭행, 협박, 위협, 무력사용 성폭행 범죄 시 집행유예나 감형 금지
4	디지털 성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설치, 해외 공조 추진

	처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영상 식별 후 자동삭제하는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및 실행에 대한 지원예산 확보 -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 피해촬영물 신속한 삭제, 차단토록 - 불법 촬영물 제작자, 유포자, 소비자 모두 처벌 - 피해자 특정 불법촬영물, 재범 시 가중처벌 - 제작자, 유포자에게 불법 촬영물 삭제비용 청구, 소비자는 벌금형 - 유통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 강화
5	종합적인 여성폭력 예방 및 지원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교육 표준안 보완해 성평등인권 통합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 포함 - 여성폭력 피해자의 쉼터, 주거지원 확대, 생계비, 의료비, 동반아동 등의 지원 현실화
6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범죄 방지 제도를 미국, 영국 수준으로 개선, 범죄자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으로 강력 처벌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 12세 미만자와 성행위 시, 12세 이상~16세 미만자 폭행·협박·의식불명상태 성행위 시 최고 무기징역 - 「형법」 개정 : 아동·청소년 범죄의 경우 감형, 집행유예, 가석방 금지 - 성착취 피해 아동 및 청소년 보호 법안 마련 - 흉악범죄자 인적사항에 대한 공개 확대, 접근금지 강화
7	그루밍 방지조항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관계, 사유 없이 아동·청소년 대상 선물·돈 주는 행위,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만나는 행위에 대해 그루밍 성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처벌가능하도록
8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기관 내 디지털 성범죄 전담조직 신설, 국제공조에 대한 지원 확대 - 아동·청소년 성착취 불법영상물 제작-유포-소지 강력 처벌
9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 허용법 개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단속에 한해, 제한적으로 함정수사, 유도수사 허용하는 법 개정 추진
10	아동 성범죄자 재범 가능성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 대상 유괴죄, 성범죄, 살인죄 등 흉악범죄자의 인적사항 미국 수준으로 공개 - 피해 아동, 청소년의 집, 학교 등으로부터 1km 이내 가해자와 가해자 대리인 접근 금지